

IFS 국가 정책 제언 일차의료 활성화

서울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

서울대 가정의학과 황서은 교수



1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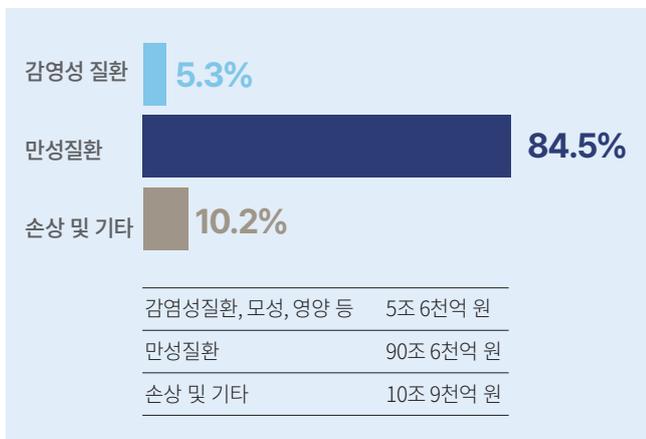
인구의 고령화

- 국제연합(UN)의 기준에 따르면,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%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, 14% 이상이면 고령사회, 20%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됨
-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자 인구 비율이 7.2%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, 2018년 14.3%로 고령사회에 도달했으며, 2024년 12월에는 20%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. 이는 OECD 37개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수준임

만성질환의 증가

-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, 전체 노인의 86.1%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, 2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비율은 63.9%에 달함
- 2023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78.1%를 차지하며,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비율이 감소하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

전체 진료비 구성비



(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·건강보험심사평가원,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)



의료비의 증가

- 2023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.5%를 차지하였으며, 최근 3년간 연평균 8.4% 증가세를 보임
-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
- 주치의 제도의 부재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여,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이 심하고, 의료비가 증가함

일차의료 현황

- OECD 보건의료 질 평가에 따르면, 한국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 같은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. 또한, 관리 가능한 질환인 고혈압 환자의 입원율도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함.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평가됨
-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려면 고비용 만성질환자의 비율을 낮추고 만성질환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, 궁극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해야 함.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기반의 보건의료 체계가 필수적임

2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

양질의 주치의

- 일차의료는 최초 접촉, 조정 기능, 지속성, 포괄성 등의 속성을 가짐. 특히 조정 기능, 지속성, 포괄성을 담당하기 위해 등록된 데이터 기반의 대상자 관리가 필수적임
- 주치의는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, 필요에 따라 의뢰 및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됨

일차의료 팀

-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케어매니저, 사회복지사, 약사,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인력이 팀을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
- 여러 연구에서 팀 기반의 진료가 만성질환 환자 관리의 의료 질과 비용을 개선하며, 지속적인 환자 중심 진료에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음

가치기반 수가

- 가치기반 수가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혈압, 혈당 조절 목표 달성도, 입원 감소 등 환자 건강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임
- 기존의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는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, 가치기반 수가는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 결과를 중심으로 보상을 조정함으로써, 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

의료기술

- 의료기술은 전자의무기록, 모바일 애플리케이션, 원격 모니터링, 웨어러블 기기 등을 포함하며, 일차의료에서 이를 활용하면 의료 정보를 통합하고, 의료인, 환자, 가족 및 지역사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, 의료 제공 주체 간의 조정 및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



3 일차의료 활성화 전략



제도적 지원

-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, 방문 진료, 의료 인력의 고용 및 근무 조건, 의무기록의 접근 범위와 권한, 요양급여비용의 배분 등 다양한 법률적인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
- 제도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, 주치의 제도의 도입, 수가제도의 개편,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,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

시범사업

-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증진 등 일차의료 과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, 장기적으로 일차의료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, 다양한 혁신적 의료서비스 모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 함

-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 모형을 제공함으로써, 지역사회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,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, 정책 효과 검증이 가능함

국가의 책임감

- 경제적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임
-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및 수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, 국가가 이를 일부 부담해야 함
- 의료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해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적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임

